

## 선군정치와 북한인권

김 수 압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응논리 측면에서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인덕정치와 더불어 선군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방식이라는 새로운 대내홍보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군정치와 인권과의 상관성에 대해 북한당국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려는 제국주의세력들의 '인권공세'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에 대해 '사회주의사상전선'을 허물기 위한 내부와해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개선을 위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치적 논리로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인권은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내정불간섭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국권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보다 경직된 대응논리로 비약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권의 관점에서 인권을 인식하는 북한의 태도는 이라크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테러에 대한 전쟁과 '비민주주의적인 억압정권'의 지배에서 인민들을 '해방'한다는 명분에 따라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미국이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침략전쟁으로 국권이 상실되면 인권과 생존권 자체가 상실된다는 냉혹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북한체제를 전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징표가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2005년 상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자주권이 상실되면 인권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것이 북한의 대응논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문헌에서는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 아래 선군정치와 인권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홍보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노동신문과 같은 관영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개선 요구가 보다 집요해지고 장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사상과 제도를 굳건하게 보위하며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은 강력한 국력이 전제될 때 보장될 수 있으므로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

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나아가 “선군은 인권옹호의 선결이며 믿음직한 담보”,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는 대내홍보논리를 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최근 대응논리는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넘어 선군정치를 통한 국권수호의 논리로 비약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